

교과서 편찬으로 본 역사교육

-일본의 국정교과서와 전후 검정교과서의 경우-

야마무로 겐토쿠(山室建徳)

머리말

Ⅰ. 국정교과서의 성립과 변천

Ⅱ. 태평양전쟁 후 사회과 교과서 속의 일본사

Ⅲ. 독립 후의 재평가

맺음말

머리말

근대국가에서의 초등교육은 국가의 일원, 즉 국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상식’을 아동에게 주는 장이다. 이 경우 배우는 아동 측에서 보면, 특정한 사고를 일방적으로 강요당하는 측면이 틀림없이 존재한다. 교사는 1 더하기 1은 2이며, ‘當然’이라는 한자는 ‘당연’이라 읽고 필순은 이렇다하고 정해서 가르친다. 또 수업 중에 떠들거나 자리에서 벗어나면 야단쳐서 예의범절도 가르친다. 이러한 지식과 규범을 오른쪽 왼쪽도 모르는 판단력이 없는 아이들에게 억지로 주입시키는 것이 학교교육이 하는 역할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친 내용은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어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다. 국민이 서로 나누어 가져야 하는 상식을 표준어를 써서 전국에서 같은 교과과정에 의해 일제히 전하는 것이 학교교육이다. 이렇게 해서 순진무구한 아이들이 비슷한 가치관과 지식을 공유하는 ‘국민’이 되어간다. 그런 까닭에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현재의 국민이 공유하는 상식’을 ‘차세대에 일방적으로 침투시키는 수단’이 된다.

태평양전쟁 패전 이후 일본에서는 이전에 국정교과서에 의해 국가의 가치관이 국민에게 강요되고, 그 결과 전쟁으로의 길이 열렸다는 해석이 확대되었다. 즉 ‘차세대에 일방적으로 침투시키는 수단’이라는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서 ‘현재의 국민이 공유하는 규범’

이 아니라 ‘지배자에게 편리한 이데올로기’가 주입되었다는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는 그러한 반성에 서서 그것과는 반대로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내용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되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국정교과서가 폐지된 것은 그것이 국민 사상통일의 도구로서 이용되어 국민의 두뇌에서 탄력성을 상실시켜서 무비관적으로 전쟁에 돌입한 것에 대한 통렬한 반성에서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말하면 민간편찬국가관리론자는 이러한 폐해는 검정제를 민주적으로 함으로써 피할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번 선거 때 내건 민주당의 문교정책에서는 ‘현행 교과내용은 우리 국가 정세에 적응하지 않는 것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개혁을 가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사상통제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단지 형태상으로 민주적인 검정제를 만든다고 해도 이미 정부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이상은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중략) 이전에 초등학교는 국정이었지만 중학교는 민간편찬 것을 사용했다. 그것이 최소한도이긴 하지만 국민의 두뇌 탄력성을 유지시켰던 것이다. 만일 만6세부터 15세에 이르는 모든 중등, 초등학생에게 이러한 교과서를 똑같이 강요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그들의 두뇌는 화석처럼 되어서 일체 창조적 정신을 잃게 될 것이다. 이것은 결코 과장되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讀賣新聞》 사설, 1955년 3월 26일).

여기서는 국정교과서가 국민으로부터 ‘일체의 창조적 정신’을 빼앗았으며 그로 인해 ‘무비관적으로 전쟁에 돌입’했다고 한다. ‘민간편찬’이었던 중학교 교과서가 간신히 ‘국민의 두뇌 탄력성을 유지시켰다’라고 하는데 태평양전쟁 패전 이전에는 중학교 진학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인텔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이 ‘화석’ 뇌가 되었다고 하는 이미지일 것이다. 그리고 선거로 선출된 정부가 ‘우리 국가 정세에 적응’하도록 적극적으로 검정을 행하는 것조차도 ‘사상통제’로서 배척되었다.

그 밖에도 예를 들어 《朝日新聞》 사설이 “태평양전쟁 후 교육개혁에서 교과서제도가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뀐 것은 교육의 민주화를 중시하는 데에 있어 당연한 일이다”(1957년 4월 21일)라 하였고, 《每日新聞》 사설이 “오늘날 자유 제국은 거의 전부 검정제도를 취하며 공산권 제국이 국정제도를 취하고 있는 사실에서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검정제도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1955년 9월 5일)라고 쓴 것처럼, 국정교과서에는 마이너스의 이미지가 붙어 다닌다. 전후 일본에서 유력해진 이와 같은 국정교과서像은 과연 어느 정도 실태를 반영한 것일까. 맨 먼저 국정교과서제도의 형성과 그 역사서술의 특질을 더듬어 보고 이것을 확인하고 싶다. 그런 다음 국정교과서와는 對極의 방향을 지향한 전후의 초등학교 사회과교과서에 대해, 특히 일본사 기술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고자 한다.

I. 국정교과서의 성립과 변천

1. 검정교과서제도의 붕괴와 국정교과서제도의 도입

메이지(明治)기의 교과서 통제는 1880년 6월 文部省 지방학무국에 교과서조사계[教科書取調掛]를 설치하여 각 府縣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조사에 착수했을 때 시작되며, 1886년의 교과용도서검정조례, 이듬해 이것을 개정한 교과용도서검정규칙에 의해 교과서검정제도가 확립되었다. 실은 이 두 省令은 검정에 대한 생각이 크게 다르다. 어느 문부관료는 나중에 “검정의 목적은 교육상 폐해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소극적)과 교육상 적당함을 증명하는 것(적극적) 두 가지로 나뉘어야 하며, 도서검정 상의 연혁에 비추어 실로 이 두 가지의 역사를 겪었다”라고 말하고 1886년의 조례는 후자, 1887년의 규칙은 전자였다고 지적했다[梶山雅史, 1988 《近代日本教科書史研究》(ミネルヴァ書房) 314]. 교과서검정이란 교과서에 유해한 기술이나 명백한 오류가 없는지를 체크만 하는 소극적인 것인가, 학교교육에 걸 맞는 기술 내용인지 아닌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 관점이 검정제도 개시 시점부터 등장했다. 그리고 이후 문부성의 검정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동요하면서도 실은 소극적 검정 쪽이 주류였다.

또 한편에서 문부성 자신이 교과서를 편찬해야 한다는 생각도 일찍부터 등장했으며, 실제로 민간의 검정교과서와 경합하는 형태로 간행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국가 스스로 교과서를 편찬하는 것은 구미선진제국에서는 거의 예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민간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문부성 자신도 구미의 제도를 상세히 조사하고 국정화하기로 단행하지 않았던 것도 그 때문이라 생각된다. 메이지 이후 항상 구미의 제도를 모범으로서 수용해온 일본에게 서구에서 정부가 교과서 발행에 관여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은 의미가 컸다. 이 때문에 교과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일정한 規矩를 구하는 것은 도저히 곤란함을 면치 못한다. 굳이 일정한 規矩를 만든다면 문부성은 늘 저술자와 쟁의를 열게 될 것이다. 학문상의 規矩를 다투는 것은 학자 일개인의 임무이며 행정의 권력에 맡길 수 없다”라고 잘라 말하고 소극적인 검정으로 일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文部大臣에게 제출한 문부관료도 있는 정도였다(《앞 책》 79). 교과서를 ‘학문상의 規矩’만으로 편찬할 수 없음은 분명하며 교육행정에의 평가가 지나치게 낮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행정의 권력행사를 되도록 자제하려는 의식이 문부성 내에도 존재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887년에는 문부성에 의한 소극적 검정 방침이 취해지는 동시에 각 府縣 별로 사범학교장, 학무과 직원, 초등학교 교원, ‘지방경제상의 정황에 정통한 자’ 등으로 이루어진 심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교과서 채택은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서 여기서 결정하였다. 즉 문부성은 필요 최소한의 검정을 하고 거기서 합격한 것 중에서 학교교육에 걸 맞는 교과서를 각 府縣의 심사위원회가 선택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실은 이 채택법에 검정제도 붕괴의 원인이 잠재해 있었다. 초등학교용 교과서는 취학률의 향상과 함께 매년 방대한 권수가 출판되어 메이지 30년대 중반에는 전국의 초등학교 교과서 판매는 매년 2,500만 권 이상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형성했다. 교과서 출판은 각 府縣에서 채용되지만 하면 확실히 거액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었다. 교과서 출판사는 판매를 위해서 심사위원회 멤버에게 뇌물을 주었다. 1894년에는 신문잡지에서 교과서 채용을 둘러싼 추문이 보도되고 제국의회에서도 이것을 거론했다. 그리고 1897년 니가타(新潟)에서 경쟁에서 진 교과서 회사가 밀고했기 때문에 이것이 발각되어 의욕 사건으로서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것은 교육계 부패의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당시의 신문은 보도했다. 더욱이 일단 채용된 후 실제로 아동에게 도달하는 교과서가 견본판 보다도 지질이나 제본 상태가 훨씬 뒤떨어지는 문제도 심각해졌다. 교과서의 기술 내용보다도 유통 방식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가 행정과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 전후부터 교과서를 국비로 편찬해야 한다는 의견이 급속하게 강화되었다. 1896년 2월 제9회 제국의회 귀족원에 ‘국비로 소학교 수신교과용 도서를 편찬하는 건 건의안’이 제출되었다. 수신교과서만이라도 ‘완전한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내용이다. 귀족원에서는 찬부 양론이 격렬하게 엇갈리고 정부위원으로서 출석한 문부성 보통학무국장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과반수로 가결되었다. 이듬해 제10회 제국의회에서는 ‘국비로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는 건 건의안’이 귀족원에 제출되었다. 현재의 교과서에는 國語國字의 용법이 틀리고 문장을 이루지 않는 것이 있으며 지질이 조악한데도 값은 비싸다. ‘서점의 영리사업’에 맡겨서는 이러한 폐해는 바로잡을 수 없으므로 ‘국가사업’으로서 ‘완전한 小學讀本 및 수신과 책을 편찬하고’ 싼값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건의안은 이의 없이 그 자리에서 곧 결정되었다. 이러한 건의가 가결된 배경에는 당시 각지의 지방교육회에서 같은 건의가 다수 제출되었다고 하는, 지역사회에서의 국정 교과서에의 활발한 기운이 있었다. 그러나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문부대신은 “현재 민간출판에서 관련하여 검정을 마친 것으로서 상당한 것이 적지 않고, 또 자주 교과서를 변경하는 것은 교육상 폐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국비로 특별히 편찬

해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판단하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내각도 이를 양해했다(《앞 책》 109).

1898년 가을에 열린 제2회 고등교육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과서 검정을 엄격하게 하고 그 대신에 각 府縣의 심사회를 폐지하여 각 초등학교가 자유롭게 교과서를 채택하는 안을 문부성으로부터 자문 받았다. 문부성이 적극적인 검정을 하고 뒤는 각 학교의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뇌물 수수를 방지하려는 구상이다. 이미 잡지 등에도 자주 등장하던 개혁안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각 학교의 심사능력에 문제가 있으며 뇌물 수수가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소리도 있고, 문부성 자신이 교과서를 편찬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반대론도 나왔다. 결국 원안이 가결되었지만 법제국의 반대가 있어서 실시에는 이르지 못했다.

1899년이 되자 제13 제국회의의 중의원에 ‘소학교수신서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다. 거기에서는 “독서, 지리, 이과 등의 각 과목과 같은 것은 토지의 형세, 민속의 풍습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을 달리하는 자유를 주는 것도 불가하지 않지만 국민의 인륜, 덕성을 함양하는 수신과에 관해서는 (중략) 정부에서 속히 수신교과서를 편제해서 이를 전국의 각 소학교에서 채용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그 방법으로는 “혹은 현상 방법이나 또는 학자 등을 모아서 교과서를 편찬하거나”해서 “적당하고 상당한 교과서를 편찬”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문부차관은 “지금 조속히 그것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라고는 느끼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이전의 귀족원 건의도 “문부성 내의 논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건의가 가결된 것을 받아들여서 수신 편찬의 예산이 요구되고 수신교과서조사위원회가 조직되었다.

1900년에는 지방장관회의가 “소학교 교과용 도서는 전부 문부성에서 적당한 것을 심사, 裁定해서 전국에서 일제히 이것을 쓰게 하기” 바란다는 요망을 총리대신과 문부대신 앞으로 제출했다. 이것을 받아들여 법제국의 각 府縣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부 국정설 27府縣, 일부 국정설 13府縣, 절충설 4府縣으로 집계되었다.

1901년의 제15 제국회의 중의원에는 ‘국비로 소학교용 교과서를 편찬하는 건 건의안’이라는 초등학교용 전 교과서 국비편찬의 요구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바야흐로 소학교용 도서 심사의 폐해가 백출하여 거의 교육계를 부패시킨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문부성 보통학무국장은 반대는 아니지만 예산조치의 전망이 서지 않으므로 즉답은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 건의안도 기립자 다수로 가결되었다.

그 밖에도 1901, 1902년에 각지에서 열린 지방교육회 혹은 전국연합교육회의 대회에서는 국비 편찬 건의가 잇달아 가결되었다. 이와 같이 국정교과서에의 기운은 문부성이라는 국가행정기구 주도가 아니라 지방교육회, 府縣, 제국의회라는, 훨씬 더 사회에 뿌리내린 조직 쪽에서 고조되었다.

1902년에 문부성 視學官이 “우리는 원래 국정교과서론에 동의하지 않으며, 민간의 자유경쟁에 맡기는 편이 문화의 진보상 크게 이익이라는 것은 이론으로 말하면 확실히 움직일 수 없는 의논이지만 오늘의 실제에서 말하면 사실상 국정교과론을 시인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된다”(앞의 책, 217)라는 담화를 교육잡지에 실었다. 교과서 기술은 서로 절차탁마해야 진보하는 것이므로 민간에 맡기는 것이 조리에 맞지만 교과서 반포에 부패가 따라다니는 일본의 현상에서는 국정도 어쩔 수 없다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02년 말에는 知事, 교과서 裁定에 관여하는 관리, 그리고 주요 교과서출판사원이 연루된 대의옥사건이 일어났다(宮地正人, 1980 <教科書疑獄事件> 我妻榮 외 편 《日本政治裁判史錄 明治・後》 第一法規). 체포자가 나오지 않은 것은 7縣뿐인 대사건이었다. 출판사원의 유죄가 확정되자 省令에 의해 그 출판사 발행 교과서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이 때문에 1903년 초 급거 교과서를 검정제에서 국정제로 바꾸는 칙령이 법제국, 추밀원의 심의를 거쳐 재가되었다. 이 칙령은 그 목적을 교과서 재정에 수반되는 뇌물수수 없애는 방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칙령시행에 따른 국정교과서 편찬비가 추가예산으로서 제국의회에 제출되었다. 그런데 정부와의 대결자세를 강화하고 있던 중의원은 뇌물수수죄가 확정된 출판사 발행 교과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면 긴급성은 없고 내년도 본예산 심의 때에 다시 검토할 사항이라는 논조로 이를 부결시켜 버렸다. 더욱이 귀족원까지도 중의원에 동조해서 추가예산 삭제를 가결했다. 결국 교과서 편찬예산이 의회에서 인정된 것은 러일전쟁이 한창이던 1905년부터였다.

이상과 같은 국정교과서 도입의 경위를 가지야마 마사후미(梶山雅史)가 《近代日本教科書史研究》에서 상세하게 해명했다. 이 경위에서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1896년 이후 제국의회나 지방교육회나 지방장관으로부터 국정교과서화 요구가 강해졌다는 점이다. 교과서 채용 시의 뇌물수수 횡행은 그 이전부터 문제가 되었다. 그것을 국정교과서 도입이라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기운이 청일전쟁 이후에 널리 일본 각지에서부터 들끓었던 것이다. 자주 지적되는 바와 같이, 청일전쟁의 승리를 계기로 일본국민으로서의 일체감이 획기적으로 강해졌다. 그러한 의식의 변화와 국정교과서 요구의 기운은 뿌리가 같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내각이나 문부성은 오히려 당초 신중한 태도

를 취했다. 그러나 교과서 대의옥사건을 계기로 국정교과서 도입을 단행하자, 이번에는 政局에 관련된 움직임으로서 제국의회 쪽이 국정교과서 도입의 예산에 반대했다. 의회가 예산을 승인한 것은 러일전쟁을 경험한 후의 일이다. 이처럼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라는 두 번의 큰 전쟁을 경험하는 가운데 뇌물수수가 빈발하는 검정교과서 채택의 문제를 국정교과서제도에 의해 타개하려는 방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서 도입된 국정교과서 기술은 절대적인 위신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가장 저명한 예는 1912년에 일어난 南北朝正閏論爭일 것이다. 제2기까지의 국정역사교과서는 1336년부터 56년간 계속된 吉野와 京都에 각기 조정이 열렸던 시대를 남북조병립시대로서 묘사했다. 그러나 이것을 1911년에 《讀賣新聞》사설이 공격한 것이 계기가 되어 吉野의 남조야말로 정통적인 천황 계보라는 논의가 고조되었다. 제국의회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가 추급되어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남조정통론으로 교과서 기술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기술의 변경은 국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여론의 압력을 받아 정부가 행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 문부성은 국정교과서에 대한 전국 사범학교부속초등학교에서의 사용 경험에 근거한 의견을 《國定教科書意見報告彙纂》 1~5(1913~1919년)로서 간행하여 교과서 개정의 참고로 삼았다. 여기에 나타난 의견에 의해 교재가 교체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수신 교과서의 ‘극기’ 예로서 “고코묘천황(後光明天皇)은 태어나면서부터 천둥을 몹시 싫어하셨습니다”라는 서두로 천황이 천둥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천둥이 칠 때 처마 끝에 서서 담력을 키워 자신의 성질을 고쳤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이에 대해서 전국의 많은 사범학교에서 ‘지존의 결점을 드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교체되었다. 또 1916년에는 확일적으로 흐르는 폐해를 피하기 위해 문부성은 수신과 독본 교재를 현상금을 걸고 모집해서 실제로 채용된 응모작품도 있었다.

당시의 국정교과서를 뒷받침한 제도를 간단히 살펴보면, 1916년에 文部省 圖書官이 5명에서 9명으로 증원되고 圖書官補 5명과 圖書事務官 2명이 배치되었다. 또 1920년에는 교과용도서조사위원회가 교과서조사회로 다시 조직되었는데, 그 구성원은 다음과 같았다[中村紀久二, 1982 <國定教科書の歴史> 《復刻國定教科書(國民學校期)解説》 (ほるぷ出版)에 인용된 一覽에 정정·보족을 가했다].

- 회장 사와야나기 세타로(澤柳政太郎, 文部次官, 東北・京都帝國大學 총장 등을 거쳐 貴族院 勅撰議員)
- 부회장 미쓰치 쥬조(三土忠造, 東京高等師範學校 교수 등을 거쳐 衆議院議員・政友會)

■ 회원 오노 미노부(尾野實信, 陸軍教育總監部 본부장), 오가사와라 나가나리(小笠原長生, 해군중장, 東宮御學問所 간사), 마에다 도시사다(前田利定, 貴院 子爵議員), 도고 야스시(東郷安, 貴院 男爵議員), 도쿠토미 이이치로(徳富猪一郎, 貴院 勅撰議員 평론·역사가), 시마다 도시오(島田俊雄, 衆院議員·政友會), 히구치 히데오(樋口秀雄, 同·憲政會), 마바 에이치(馬場鎧一, 法制局 參事官), 구로이타 가쓰미(黒板勝美, 東京帝國大學 교수, 국사학), 하가 야이치(芳賀矢一, 同, 국문학), 요시다 구마지(吉田熊次, 同, 교육학), 호즈미 시게토오(穂穂積重遠, 同, 민법), 하야시 하루오(林春雄, 同, 약리학), 마쓰바라 고이치(松原行一, 同, 화학), 사사키 요시자부로(佐佐木吉三郎, 東京高等師範學校 교수, 교육학), 야마노우치 시게오(山内繁雄, 同, 생물학), 기타자와 다네이치(北澤種一, 東京女子高等師範學校 교수, 교육학), 스기우라 준타로(杉浦恂太郎, 東京市本郷 誠之尋常小學校長), 이토 후사타로(伊藤房太郎, 東京市芝 愛宕高等小學校長)

전 21명 중, 귀족원의원 4명, 중의원의원 3명, 육군 교육총감부 1명, 해군중장(단, 당시 휴직 중, 이듬해 예비역편입) 1명, 법제국 1명, 東京大 6명, 東京高等師範 2명, 女子高等師範 1명, 소학교장 2명이라는 내역이다. 그들의 역할은 圖書官(1920년 圖書監修官으로 개칭)이 중심이 되어 작성한 교과서 원고를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일이었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연구자와 교육자가 과반수인 11명이며 회장, 부회장은 제국의회 의원이다. 의도적으로 ‘군국주의이데올로기’를 주입할 배치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인선이라 말할 수 있다.

2. 국정교과서가 묘사한 근대 일본

그러면 이러한 구조에 바탕을 두고 편찬된 국정교과서는 어떻게 변화한 것일까. 1904년부터 간행된 국정교과서는 그 후 크게 나누어 5회 개정되었다.

제1기 1904년 이후

제2기 1910년 이후(의무교육 6년제 도입)

제3기 1918년 이후

제4기 1933년 이후

제5기 1941년 이후(국민학교 도입) 역사만 1940·1943년

제6기 1946년

흥미롭게도 대 개정은 어느 것이나 일본이 전쟁을 경험한 시기와 겹쳐진다. 국정교과

서 도입의 기운은 청일전쟁 이후에 고조되어 제1기는 러일전쟁과 더불어 시작된다. 제2기는 그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거둔 직후이다. 제3기는 나중에 제1차 세계대전이라 부르게 되지만, 동시대 일본에서는 주로 구주대전이라 부르던 전쟁이 종결하기 직전에 시작하고, 제4기는 만주사변이 종식한 시기에 해당한다. 제5기는 당시에는 대동아전쟁이라 부르던 미국과의 전쟁이 개시된 직전에 시작한다. 그리고 최후의 제6기는 일본이 미국에 패배한 직후의 점령기이다.

상세한 것은 줄고, 1997 <國定教科書の中の現代史> 《帝京大學文學部紀要 教育學》 22 ; 2006 <國定教科書が描く戦争と歴史> 《メディア史研究》 21로 미루겠는데, 메이지 이후의 역사서술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다.

당시의 국정교과서에서는 ‘국사’(1919년 이전 ‘일본사’), ‘수신’, ‘국어’에서 메이지 이후의 역사가 묘사되었다. ‘국사’에서는 정치나 외교·전쟁의 역사를 중심으로 국가공동체의 추이로서 회고되었다. ‘수신’은 그러한 국사 속에서 모범적인 행동을 취한 개인의 사례가 많이 취급되었다. ‘국어’에서도 인상적인 인물의 행동이나 경제발전 등이 교재가 되었다.

국사 교과서에서는 전쟁의 기술, 특히 청일전쟁, 러일전쟁의 기술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1921년 12월에 발행된 《尋常小學國史》 하권을 예로 들면, 본문 약 11,000자 중 西南전쟁(980자), 청일전쟁(1,970자), 러일전쟁(2,070자), 제1차 세계대전(1,000자)으로 전쟁 기술이 반 이상인 약 6,000자이며, 그 3분의 2는 청일, 러일 두 전쟁이다. 또 전부 14장의 삽화가 실려 있는데, 그 중 두 전쟁의 6장을 포함하는 9장이 전쟁에 관한 도판이었다.

그리고 이 두 전쟁에서는 열성적으로 천황과 국민이 하나가 되어 싸운 것이 회고되고, 여기에서 이겨냈기 때문에 오늘의 일본이 구축되었다라고 묘사되었다. 또 러일전쟁에서는 다수의 정치가, 군인들의 이름이 서술에 등장한다. 러일 강화를 알선한 인물로서 루스벨트 미국대통령까지도 전시 중에도 계속 실려 있었다. 그런데 그 이후 시기의 기술에는 패전 후에 작성된 제6기를 제외하고, 정치가들의 고유명사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러일전쟁이 ‘현대’를 형성한 획기로 파악했음을 엿볼 수 있는 기술 방식이다. 이것과는 대칭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은 담담한 서술이다. 20세기 세계사를 오늘날의 입장에서 뒤돌아보면, 제1차 세계대전은 그 개막이라고 말해도 좋을만한 대사건이지만 동시대의 일본에서는 그다지 크게 보지는 않았다.

또한 결론 부분을 검토하면, 각각의 시기 직전에 일본이 경험했던 전쟁에 촉발되어 변했음을 알 수 있다. 국정교과서를 편찬했던 문부성은 뭔가 교육방침을 완강하게 고집하며 그것을 국민에게 밀어붙였다 라기 보다는 전쟁에 의해 크게 변동한 가치규범에 아

주 유연하게 대응해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태평양전쟁 패전 후 점령군의 지령 하에 곧바로 ‘군국주의적 교재’에 먹칠하는 것을 결정하고 새로운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뒤이어 국정교과서 자체를 폐지한다는 교육행정의 대전환을 순조롭게 실행한 것은 그 전형이다. 그 정도의 변화는 아니라 해도 비슷한 일이 그 이전의 국정교과서 개정 때에도 일어났다.

그리고 일본 각지의 학교도 솔직하게 이를 받아들였고 여론이 반발한 형적도 특별히 없다. 가령 당시의 일본국민이 철저하게 세뇌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제6기와 같이 이제까지와는 이질적인 교과서 기술은 배격하는 쪽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특별히 저항도 혼란도 없이 문부성의 방침이 순조롭게 정착한 배경에는 항상 근대일본의 어지러운 정도로 빠른 변동을 계속 지탱해온 일본인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수신은 여러 가지 규범을 유명무명의 다양한 인물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말하는, 일종의 역사이야기 체제를 취했다. 그 중에서 메이지 이후의 전쟁에 관련된 기사는 다음과 같다.

- 西南전쟁 다니무라 게이스케(谷村計介)(1~3기)
- 청일전쟁 천황폐하(1~2기) 메이지 천황(3~5기) 기구치 고헤이(1~4기) 기타시라카와노미야 요시히사 친왕(北白川宮能久親王)(1~5기)
- 러일전쟁 황후폐하(2기) 히로세 다케오(廣瀬武夫)(2~4기) 우에무라 함대(上村艦隊)(2~4기) 노기마레스케(乃木希典)(3~4기) 고바야시 다마키(小林環)·고고 산시로(向後三四郎)(4기) 다치바나 슈타(橋周太)(5기) 요코가와 쇼조(横川省三)·오키 테이스케(沖禎介)(5기) 충군애국(2기) 거국일치(3~4기)
- 만주사변 황후폐하(4~5기)
- 중일전쟁 거국일치(4기) 황후폐하(5기)
- 태평양전쟁 가토 다케오(加藤建夫)(5기) 특별공격대(5기) 이누마 마사아키(飯沼正明)(5기), 전쟁축하의 날(5기) 새로운 세계(5기)

메이지천황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례가 소개되어 그의 공적이 구체적으로 이미지화하기 쉽게 묘사되었다. 추상적, 초월적으로 다룬 다이쇼천황(大正天皇), 쇼와천황(昭和天皇)과는 달리 메이지천황(明治天皇)은 사실상의 ‘건국의 아버지’로서 특별한 지위에 있었다. 이에 비해서 황후는 항상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기억되는 존재이며, 대만에서 전병사한 기타시라카와노미야 요시히사 친왕은 황족이라는 높은 신분하면서도 자기의 목숨을 희생한 것이 거듭 상기되었다. 어느 경우에도 전쟁 시 황실의 역할이 특히 강조되었다.

또 러일전쟁에서 얼마나 국민이 결속했는지를 묘사한 ‘충군애국’ ‘거국일치’라는 교재가 제5기가 되면 없어지고, ‘전쟁축하의 날’ ‘새로운 세계’로 교체되었다. 이것이 단적으

로 보여주듯이, 러일전쟁이 많은 재료를 제공했다는 것, 그리고 태평양전쟁이 개시된 제 5기가 되면 교재가 대규모 교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어에 실린 전쟁 관계 교재도 수신과 마찬가지로 경향을 보였다. 청일, 러일 두 전쟁이 많은 소재를 제공한 데 비해 제1차 세계대전은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만주사변도 새로운 교재를 더하였고, 대동아전쟁이라 불렀던 전쟁이 시작되자 러일전쟁의 비중이 줄어들고 대폭적으로 교재가 교체되었다.

이상과 같이, 국정교과서에서 ‘전쟁으로의 길’이 먼저 쓰이고 그것이 사회에 침투한 것이 아니라 일본사회의 표면상의 원칙이 전쟁에 의해 크게 변하고 그것이 교과서에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Ⅱ. 태평양전쟁 후 사회과 교과서 속의 일본사

이제부터 전후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일본사’ 특히 ‘근대일본사’가 어떻게 기술되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역사교과서문제라고 하면,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의 일본사 교과서만 주목을 받는 한편 초등학교 단계의 역사교육에는 그다지 관심이 집중되지 않았다. 분명히 기술 내용은 중학, 고교에 비하면 훨씬 간략하지만 도리어 그 쪽이 ‘역사관’을 드러내기 쉬운 면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또 국정교과서와의 비교라는 점에서도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토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초등학교 ‘역사교과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정교과서 시대에는 ‘일본사’ 혹은 ‘국사’ 교과서가 있었지만 태평양전쟁 후가 되면 지리·역사·수신이 폐지되고 ‘사회과’라는 과목이 되었다. 그래서 ‘사회과’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 교과이며, 거기에서 ‘역사’ 혹은 ‘일본사’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최초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점령기에 만들어진 ‘사회과’의 역사서술이 독립 이후 어떻게 변모했는지, 혹은 변하지 않았는지를 더듬어 보고자 한다.

1. ‘사회과’의 이념

1947년도에 문부성이 최초로 내놓은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이번에 새로 마련한

사회과의 임무는 청소년에게 사회생활을 이해시키고 그 진전에 진력하는 태도나 능력을 양성하는 것이다”라고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이해하는 데에는 상호의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인간성의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성’이란 사회를 형성하는 좋은 장점이며, 인간이 반드시 가지는 잔혹함이나 교활함과 같은 측면은 시야에 넣지 않았다. 마이너스의 측면은 인간의 내측보다도 사회제도라고 하는 외부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종래 우리 국민의 생활을 생각해 보면, 각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자각 혹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려는 바람이 국가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외면적인 요구에 억압되었기 때문에 해소되지 않았던 경향이 있었다. 그 때문에 도리어 국민으로서의 생활에도, 가정의 일원으로서의 생활에도 가지가지 부자연스러움, 부도덕함이 생겼음은 서로 통감한 것이다.”

국가나 가정이라는 종래의 일본 사회제도는 본래 사람들 내면에 있는 훌륭한 ‘인간성’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존재였다. 이러한 대립관계를 타파하고 ‘청소년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려는 마음을 키워 주는 것’이 ‘기본적인 인권 주장’이며 ‘사회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타인에의 이해와 타인에의 애정을 육성하는 것’이 된다고 한다.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이렇게 크게 바꾸려고 하는 이상, ‘사회과’ 교수법도 이제까지와는 크게 달랐다.

“종래 우리나라의 교육, 특히 수신이나 역사, 지리 등의 교수에서 보였던 큰 결점은 사실이나 또는 사실과 사실과의 관련 등을 올바르게 파악하려고 하는 청소년 자신의 사고방식 혹은 사고하는 힘을 존중하지 않고 타인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려는 데에 있다. 이것은 지금 충분히 반성해야 한다. 물론 그것은 교육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사회일반에 통용되었으며 그 재앙의 결과는 이번의 전쟁이 되어 나타났다고 말해도 지장이 없을 것이다. 자주적,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키워가는 것이 사회과 속에서 행해지는 여러 활동에서 언제나 궁리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타인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려는 것’이 이제까지의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의 근원적인 잘못이라 여겼으며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고도 해석되었다. 물론 점령군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정착을 지향하기 때문에 ‘재앙’의 되풀이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청소년 자신’과 ‘자주적 과학적’이라는, 본래 크게 다른 가능성이 있는 두 가지 ‘사고방식’이 겹쳐져서 그것을 육성하는 것이 향후의 목표로서 내걸었다.

그것은 ‘자기들이 뭔가 행동을 하고 사회와의 교섭을 경험함으로써만 얻어지는’ ‘생활

방식으로서 민주주의'라고도 표현된다. 이 때문에 '각 학생이 반듯하게 자리에 앉아서 교사가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다종다양한 활동을 추구하거나 혹은 도와주는 설비가 갖춰진 작업장으로서의 교실이나 학교가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체험형' 수업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그것은 종래의 교과 그리모으기나 종합이 아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까지의 수신·공민·지리·역사 교수의 모습은 바야흐로 사회과 속에서는 보이지 않게 된다”고 이제까지의 교과 해체가 선언되었다. 그 결과 이제까지에 비해 “전체적으로 학문적인 계통이나 표면적인 계통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것보다 훨씬 강고하고 또 한층 자연스러운 계통이 있는 것, 즉 청소년의 생활경험을 계통적으로 발전시키도록 고려된 사실에 주의하기 바란다”라고 한다.

역사나 지리 등에 대한 지식을 전수하는 장이 아니라 사회적인 경험을 쌓게 해서 민주주의적인 사회의 담당자가 되는 것이 새로운 목표가 되었다. 태평양전쟁 패전 이전의 역사가 부정적으로 파악된 이상, 그것을 계승하기 보다는 그것과는 단절한 새로운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는, 일종의 '혁명'적인 기분이 '사회과'에는 가득 차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가 우리나라의 전통을 충분히 존중하고 이것을 청소년에게 잘 이해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또 그것은 당연히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하면서 그 직후에 다음과 같이 지적되기도 했다.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 대부분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도 학교도 살고 있는 토지의 사회도 십중, 이십 중으로 인습에 의해 간혀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까닭에 교사는 이러한 생활에 대해 지도하는 경우 항상 다른 가정이나 다른 학교나 다른 토지의 사회를 비교하는 것이 유익함을 잊지 않기 바란다.

‘인습’에 갇힌 ‘우리나라’와 비교해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확립된 나라들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을 이해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는 있을 테지만, 서구선진국의 역사와 현상이 모범이 되고 눈앞에 있는 일본사회는 비판의 눈에 드러나는 존재가 되었다.

서두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초등교육 단계에서는 ‘일본국민’으로서 공유해야 하는 규범과 지식을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에게 주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국어에서 한자 필순이나 읽기를 가르치는 경우에도, 산수에서 곱셈이나 나눗셈을 가르치는 경우에도 ‘정답’을 아동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것에 의심을 가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국어나 산수와 마찬가지로 역사나 지리 등의 과목도 지식전수형이라 생각하면 가르치는 방식에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이다. 태평양전쟁 패전 이전의 일본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왔다.

그러나 점령 하의 문부성은 그것이 잘못이며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조차했다. 일본인이 공유해야 하는 지식을 초등학생에게 전수하는 교육방법이 ‘사회과’에서는 부정되어 버렸다. 이러한 지식전수형 대신에 체험형을 목표로 하는 사회과에서는 ‘역사’의 비중은 낮지 않을 수 없었다. 또 일본이 걸어온 길을 비판하는 시점에서는 ‘일본사’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도 제한되었다. 사회과와 자국사는 이 두 가지 이유에서 서로 용납되지 않는 관계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과 교과서’의 새로운 기술

그러면 사회과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과내용을 지향한 것인지를 ‘사회과’ 6학년용 교과서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1951년에 문부성 검정을 통과한 《わたしの社會科(6학년 상)》(富士교과서)를 살펴보자. 이 교과서는 ‘우리들의 자치’라는 장으로 시작한다. 거기에는 시업식 다음 날 ‘학급자치회를 열고 학교자치 기구나 규칙에 대해 상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먼저 ‘마사오(正男)’가 의장에 선출되고, 후생위원과 환경미화위원의 통일이나 음악위원의 설치 등이 최초의 의제가 되었다. 그러는 도중에 ‘다쓰오(達夫)’가 갑자기 “학급자치회, 학교자치회, 각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규칙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나 마을의 정치로 말하면 입법이라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정된 것을 위원회나 대표위원회가 행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행정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정된 것이 잘 행해지는지, 잘 행해지지 않을 때에 단속을 하거나 벌주는 사법과 같은 일을 하는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한다. 과연 교과서 본문은 이 ‘다쓰오’의 발언에 대해 “갑자기 어려운 것에 대해 말을 꺼냈습니다”라고 받아들이지만 이 의논은 더 계속된다. ‘다쓰오’는 “국가의 정치에도, 마을의 정치에도 삼권분립이라고 해서 하나하나가 독립되어 있습니다. 규칙이 올바르게 지켜지고 나서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주장한다. 이것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결국 ‘모두 생각에 잠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의견을 듣기로’ 한다. ‘선

생님’은 “분명히 다쓰오 군이 말하는 마음가짐이 아니면 안 됩니다”하고 말한다. 그러나 “학교나 학급은 좁은 곳이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하면 바로 눈에 띄며” “선생님도 여러 분들과 함께 생각하기도 하고 의견을 내기도” 하기 때문에 ‘사법’을 특별히 마련하지 않아도 ‘공정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서 모두가 납득하게 된다.

그 후 여러 가지 일을 상담하고 결정해 간다. 그리고 “박수를 친 뒤 6학년이 되어 개최된 제1회 학급자치회는 끝났습니다. 모두들 학교를 자기들의 손으로 더욱 더 좋게, 즐겁게, 아름답게 만들려는 각오로 눈을 반짝이면서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이러한 학급자치회가 각 학급에서 개최된 데 입각해서 이틀 후에는 학교자치회가 열렸다. 맨 먼저 임원 선거를 하게 되었는데, ‘아키라(明)’가 “우리 반에서 나오도록 상담해서 잘 해줘”라고 말을 꺼내자 이에 대해 ‘젠지(健治)’는 ‘아키라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기 반이라고 해서라든가, 사이가 좋아서라든가, 집이 가깝다거나 그런 소심한 마음가짐으로는 좋은 선거를 할 수 없어. 바른 사람, 역할에 걸 맞는 사람을 뽑는 것이 좋은 자치이며 좋은 정치다.” 결국 6학년 위원이 ‘학교자치에 대해서’ ‘누구나 훌륭한 의견’을 말하고 무기명투표로 의장, 부의장, 서기가 선출되었다. 그 후 학교 내의 일 뿐 아니라 ‘이번에 새로 생긴 마을회관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하고 다양한 희망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의장이 ‘열성적인 태도’로 다음과 같이 매듭지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서 보인 진심과 열정은 그대로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며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이며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학교 자치를 잘 하는 것은 마을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중략) 우리들은 학교 자치와 마을과의 깊은 관련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묘사된 바와 같은 ‘자치’를 정말로 실현한 초등학교 따위는 없음을 틀림없다. 이것은 ‘전후 민주주의’의 ‘신화’를 어른의 시선에서 묘사한 내용이라고 말해도 좋다. 필자도 1965년경에 어린이회 선거를 경험한 적이 있다. 4학년생 이상이라고 기억하는데, 전원이 교정에 정렬해서 6학년 후보자가 단상에 서서 말하는 소신을 듣고 투표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후보자의 사람됨도 몰랐으며 누구나가 흔히 있는 일밖에 말하지 않아서 선택의 여지 따위는 없었다. 4학년 때는 유일한 여자후보에게 투표했던 기억이 있다. 5학년 때 한 후보자가 최후로 “○○○(성), ○○○, ○○○△△△(이름) 잘 부탁드립니다”하고 실제 선거에서 후보자가 자기 이름을 절규하는 어조를 그대로 흉내내어 외쳤다. 그때까지 암전하게 듣고 있던 집단에서 이 때 환성이 터져 나왔던 것을 지금도 선명한 기억으로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의 이름을 지금도 분명히 말

할 수 있을 정도이니까 필자에게는 어지간히 인상적이었던 것이다. 그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선거는 폐지되고 임원은 전부 교사 지명제로 바뀐 것도 기억하고 있다. ‘어린이회 선거’가 ‘민주주의’ 교육에 소용이 될 리가 없음을 교사 측도 확실히 인식했음에 틀림없다.

민주주의에 의한 학교운영을 배우고 그 경험이 그대로 마을 운영에 이어진다고 이 사회과 교과서는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1장의 ‘우리들의 자치’에 이어 제2장 ‘지방자치’에서 마을의회나 관공서의 일이 소개되었다. 그리고 제2장 맨 마지막에 ‘지방자치의 추이’라는 절에서 일본 통치제도의 변천이 개관되었다. 거기에서는 다이카 개신(大化改新)에 의해 만들어진 구조는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보다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무거운 의무를 지게 되었다’고 하고, 에도막부에 대해서도 ‘막부의 정치를 잘 해서 막부의 세력을 강하게 하기 위한 제도였다’고 판정되었다. 메이지 이후의 개혁에 대해서는 ‘봉건시대부터 민주시대로의 큰 추이를 보여줍니다’라고 일단 평가되지만 납세액으로 선거권에 제한이 있고 그것이 철폐된 후에도 여자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았던 점, 府縣知事が 국가 임명이었던 점 등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이 절은 다음과 같이 매듭지었다.

태평양전쟁이 격렬해짐에 따라 1943년에는 국가의 힘으로 市町村長の 권한이 강해지고 시정촌회의 권한은 약해져서 자치 범위가 아주 좁혀져 버렸습니다.

태평양전쟁 종전 후 새로운 헌법이 국민의 대표로 성립된 의회에서 연구를 거듭한 끝에 지금과 같이 민주적인 지방자치가 행해지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패전을 경계로 일본의 통치제도는 근본적으로 바뀌어 민주적이 되었는데, 그 이전의 구조는 국민과 대립관계에 있는 국가를 위한 것이었다고 묘사되었다.

이상과 같은 교과서 기술에서는 두 가지 특징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학교는 초등학생의 자치를 큰 지주로서 유지되어야 하는 장이며 거기서 배운 ‘민주주의’가 그대로 지역사회나 국가를 통치하는 원리가 된다는 파악방식이다. 또 하나는 이러한 민주주의는 패전 후 처음으로 확립된 구조라는 견해이다. 각각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려 한다.

《たのしい社會科(6학년)》(大日本圖書, 1954년 문부성 검정필)에서는 “이처럼 대표자를 뽑고 모두를 대신해서 그 사람에게 정치를 하게 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市町村뿐만이 아닙니다. 縣이나 국가 전체와 같은 큰 구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학교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구조로 어린이회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술되었다. 그러나 아동의 민주주의적인 운영으로 초등학교가 유지되는 일 따

위는 물론 현실에는 있을 수 없다. 초등학교는 교직원의 관리와 지도하에 아동이 한 사람의 국민이 되기 위한 초기훈련을 받는 장이다. 지역사회나 국가와는 달리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조직이다. 그러나 장래 민주일본의 담당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민주주의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과’의 발상이었다.

《わたしたちの社會(6학년)》(學校圖書, 1956년 문부성 김정필)에서는 ‘학교어린이회’에서 ‘운동장 사용 규칙’과 ‘도서실의 도서구입’에 대해 정경을 묘사한 뒤 “학교어린이회는 이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좋아져 가고 있습니다. 학교어린이회가 좋아지는 것은 학교 전체가 좋아지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학교생활도 한층 즐거워집니다”라고 ‘학교어린이회’가 학교운영의 중심에 놓여 있다. 그리고 “모두 서로 이야기해서 여러 가지 계획하거나 실행하는 것은 학교어린이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웃이나 가정에서도 모두의 생활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서로 여러 가지 의견을 말하고 일을 계획하고 실제로 행합니다”라고 학교 밖으로 눈을 돌린다.

“우리들은 자기 혼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나 가정이 자기만의 생활이 아닌 것처럼 이웃 생활도 이웃사람들과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협동생활을 깨뜨리게 됩니다.”

이처럼 ‘협동생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설문이 나온다.

1. 여러분의 집에서는 여러 가지 일로 가족 전원이 서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어떻게 서로 이야기했는지 발표해 봅시다.
2. 여러분 근처에서 모두의 의견에 의해 일을 계획하고 실제로 한 예가 있다면 조사해 봅시다. 그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도 들어 봅시다.

가족도 근린생활도 ‘서로 이야기함’으로써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직장조차도 마찬가지로 파악된다.

사람들의 생활은 이웃과의 연관만이 아닙니다. 공장이나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에 힘쓰고 서로 도우며 협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직장에서는 모두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아버지나 형이 근무하는 공장이나 회사에서는 모두의 의견을 발표하거나 모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지 들어 봅시다.

많은 공장이나 회사에서는 직장의 기관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견으로 모두가 공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의견이 달라서 대립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몇 번이고

지상에서 서로 의논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의논한 것이 또 서로의 생각을 깊게 하기도 합니다.

생산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조차도 ‘어린이회’의 연장으로 파악하여 ‘기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되고 같은 페이지에는 노동조합 기관지라고 생각되는 사진이 실려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여론의 중요함과, 거기서 신문이 하는 역할을 설명하는 장이 배치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전원이 평등한 입장에서 민주주의 원칙으로 일을 결정해가는 것이 원래 그려야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초등학교의 실태에서 동떨어질 뿐 아니라 일본사회의 실정에서도 유리된 견해를 형성하는 것이 될 것이다. 가족도, 회사나 대학을 비롯한 근대적인 기구도, 혹은 직인이라 부르던 사람들이 형성한 전통적인 일터에서도, 일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속하는 조직은 지도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는 역연하며, 지도자는 구성원이 ‘민주적인’ 절차로 선출하는 것도 아니다. 대 조직이 되면 될수록 계층이 늘어서 복잡해지고 서열이 확대되어 간다. 그러한 조직은 일본사회 속에서 오랜 시간을 들여서 육성되어왔다. 현실 사회에서는 자기를 조직의 톱니바퀴의 하나로서 그 톱니바퀴에 맡겨진 작은 과제를 묵묵히 처리하는 이외에 길은 없다. 그 인간이 어떤 입장에 있는가 하는 것으로서 역할분담이 명백하게 다른 세계이다. 그러한 세계의 일원이 되는 것이 어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터인데 ‘사회과’ 교과서에는 그와 같은 시점은 나오지 않았다. 오로지 평등한 인간 동지가 서로 이야기함으로써 일을 결정해가는 것이 사회라고 이야기될 뿐이었다.

어째서 이러한 편파적인 사회관에 바탕을 둔 ‘사회과’ 교과서가 된 것일까. 그것은 제2 논점, 즉 민주주의가 일본에서 확립된 것은 태평양전쟁 패전 후의 일이라는 인식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아직 충분히 굳지 않은 사회과의 지반을 뒤흔들어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이제까지의 ‘교육내용을 되도록 바꾸지 않는다는 방침 하에’ 1951년에 개정된 《학습지도요령》 사회과편 제6학년의 목표를 일부 뽑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치’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질 권리를 가지고 있다.
-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모두가 협력하는 것이 정치이어야 한다.
- 정치상의 온갖 제도나 시설의 역할은 사회생활을 합리화해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다.

-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개 사람들의 협력에 의한 민중의 자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 옛날에는 신분에 구별이 있어서 사람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지장을 받았다.
- 옛날에는 나라의 정치가 일부 사람들의 의견으로 행해지고 일반민중은 참여할 수 없었다.

여기서는 에도시대까지의 신분제나 메이지 이후의 제한적인 구조와 대비하면서 태평양전쟁 후의 정치제도를 칭찬하는 기술이 장려되었다. 긍정되고 칭찬받아야 하는 것은 전후에 형성된 현재의 체제이며, 패전 이전, 문명개화 이전의 구조는 그것과 대조로 부정적으로 파악된 데에 특징이 있다. 패전을 경계로 해서 일본은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또 국제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학습목표가 된다.

- 세계의 국가들은 물질적인 면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면에서도 밀접한 상호의존관계에 있다.
- 나라를 달리하면 생활 방식도 달라지지만 사람들은 역시 인간으로서의 공통 욕구를 가지고 있다.
- 나라를 달리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인류의 일원이기 때문에 서로 존경하고 서로 행복을 바라지 않으면 안 된다.
- 전쟁은 인류에게 최대의 불행이다.
- 우리들은 전력을 다해 전쟁 회피에 힘써야 한다.

여기서 강조된 것은 국적보다도 ‘인간’ ‘인류’이며, 그 ‘인류에게 최대의 불행인’ ‘전쟁의 회피’이다.

오늘날의 일본이라는 통합체는 선조들이 부지런히 쌓아올린 노력의 축적 위에 서 있다는 연속성의 관점보다도 과거를 부정함으로써 전후가 되어 새로 형성되었음이 강조되고, 일본의 독자성을 보기보다는 인류의 일원으로서의 자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6학년 사회과의 목표였다.

이러한 목표가 교과서의 다음과 같은 기술이 되었다. 日本書籍 판 6학년 사회과 교과서(《世界をむすぶ》 6上, 《日本と世界》 6中, 《幸福のために》 6下, 1951년 문부성 검정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본에서도 정치 구조나 방식에는 여러 가지 변천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제멋대로 규칙을 만들고 제멋대로 명령을 내리고 제멋대로 재판을 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 보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신분도 사농공상과 같이 정해져 있어서 농민이나 상인은 무사보다도 신분이 낮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들이 스스로가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정치는 도저히 바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五人組 등을 설명한 뒤 “어쩌면 그토록 심한 정치 구조인가. 이로써는 사람들은 도저히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몹시 나무랐다. 현재와는 다른 과거의 정치 방식은 역사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감정적인 말투로 단죄하는 대상이 되었다.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국헌법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을 모두 존경하고 중히 여기는 정신에 바탕을 두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행복을 지키도록 정해졌습니다”라고 칭찬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헌법에서는 정치는 전부 천황의 것이며 국민은 그저 그것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헌법에서는 국민이 스스로 정치를 하는 것이며 천황은 나라의 상징으로서 국민의 존경을 받고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정치는 민주주의에 의해 행하고 국민이 자신의 일을 자신이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힘, 즉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이제까지 천황이 했던 역할은 부정되고 대일본제국헌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는데, 현행 헌법이 되어 가까스로 ‘국민주권’의 ‘민주주의’ 정치가 되었음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묘사 방식은 대부분의 교과서에 공통되었다. 《改訂新しい社會科》 6학년 상(東京書籍, 1951년 문부성 검정필)에서는 지금은 민주주의 세상이지만 ‘옛날에는 어땠을까요’라고 질문한다. 그리고 “아래의 그림에도 있는 것처럼 멋진 행렬을 만들어 나아가고 있는 大名은 특별히 신분이 높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은 이 행렬이 오면 땅위에 앉아서 머리를 숙이고 지나가는 것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정도였으니까 정치를 하는 것은 신분 높은 大名로 정해져 있었습니다”하고 질문에 대답한다. 또 “이러한 삶은 세상으로부터 80 몇 년 전까지 오랫동안 꼭 계속 되었습니다”라고 써서 무사를 지배자로 하는 신분제 시대가 ‘삶은 세상’으로서 감정적인 표현으로 일괄되었다. 메이지가 되어 도입된 의회제도에 대해서도 선거권의 제한, 귀족원이나 의회가 뽑지 않은 총리대신의 존재가 지적되고 ‘모든 국민의 생각을 담은 법률’을 만들어지지 않아서 ‘대신이 언제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 방식을 완전히 고친 것이 새로 만들어진 일본국헌법입니다”라고 대비되었다. 그것은 ‘아직 이제 막 시작해서’, 이제부터 ‘어떤 좋은 열매를 맺을지’ ‘책임은 전부 국민에게 있다’라고 전망되었다. 이렇게 해서 태평양전쟁 패전이 일본의 정치사를 나누는 최대의 경계선으로 간주되고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흐름이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이 패전 이전의 일본은 현재에 비해 부정적인 요인을 가진 시대로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일본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은 비민주적인 사례를 끄집어내어 패전 후에 행해진 개혁의 훌륭함을 두드러지게 했다고 조차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빛나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면, 유럽 ‘봉건제도의 구조를 허물고 국민의 힘에 의해서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한’ ‘민주주의를 위한 혁명’이었다고 한다[《社會》 6학년 상 (敎育出版, 1952년 문부성 검정필)]. 그것은 영국에서 시작하여 미국 독립이 되었다. 그때 발표한 ‘독립선언’에 대해서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권리, 즉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서 그 정도로 힘차게 표현한 것은 그때까지의 역사에서는 독립선언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후의 민주주의 발달에서 이 선언은 언제나 모범으로 여겼습니다. 지금의 일본 헌법도 이 독립선언의 정신을 흡수하였습니다”라고 지적되었다. 더욱이 이 영향을 받은 프랑스혁명이 일어났다고 했다. “이 혁명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인권선언’을 세계를 향해 발표한 것”이며 국민주권을 포함하는 내용이 설명되었다.

그리고 일본국헌법의 성립을 설명하는 장에서는 그 前文이 소개되고 “그 중에서도 ‘인류 전체에 들어맞는 원리에 의거하고 있다’라고 일컬어지는 것 속에는 영국, 미국,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나라 사람들이 지금까지 인권확립을 위해서 진력해온 노력의 결과가 표현되어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하고 싶은 것입니다”라는 것이다. 에도시대나 메이지시대 선각자의 존재도 지적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미국독립이나 프랑스혁명의 정신이 일본국헌법에 의해 비로소 일본에도 결실했다고 설명되었다. 현대 일본의 정치가 그 이전 일본의 통치형태보다도 구미 민주주의혁명의 흐름을 계승하고 있다고 자리매김되었다. 전후 개혁이란 ‘혁명’에 필적하는 변혁으로 보았다.

‘민주주의 발달’의 설명으로서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혁명’을 채택한 것은 《世界と結ぶ日本》 6학년 하 (帝國書院, 1954년 문부성 검정필)에서도 공통된다. 여기서도 “민주주의의 근본이 된 생각은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라고 하고 “종전 후에 지금의 헌법이 만들어지고 비로소 일본이 진정으로 민주적인 국가 형태를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는 역사관이 되풀이되었다.

Ⅲ. 독립 후의 재평가

이처럼 점령기에 만들어진 ‘사회과’에서는 일본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었다. 지식 전수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체험 습득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역사교육의 역할이 적어질 수

밖에 없었고, 또 태평양전쟁 패전 후에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향후 그것을 육성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일본의 주이는 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 상세하게 가르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후 ‘사회과’ 6학년 교과서에서 차지하는 ‘일본사’의 기술은 점차 늘어나서 현재는 3분의 2 정도를 차지한다. 전후 일본에서는 체험형 사회과 교육이 정착하지 못하고 메이지 이래의 지식전수형으로 회귀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일본국민으로서의 상식을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에게 가르치는 것이 초등교육의 목표이기 때문에 당연한 귀결이라 말할 수 있다. 사회과 교과서가 이와 같이 변모한 과정을 아래에서 개관하겠다.

일본의 독립 이후 점령기 시책이 다양한 분야에서 재평가되는 되흔들림의 시대가 돌아왔다. 교과서에 관해서는 민주당이 1955년에 제출한 《うれうべき教科書の問題》가 계기가 되어 큰 정치문제가 되었다. 민주당은 총재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가 1954년 말에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의 뒤를 이어받아 내각 총리대신이 되어 처음으로 정권정당의 자리를 차지한 참이었다. 점령기에 요시다 시게루는 자유당을 이끌고 오랫동안 수상을 맡은 데 비해 하토야마는 공직추방의 쓰라림을 겪었다. 그 하토야마 민주당에게 점령정책의 재평가는 당연한 정치과제였다.

8월에 최초의 팸플릿 《うれうべき教科書の問題》가 간행된 데 이어서 10월에는 속편의 2, 11월에는 3이 나왔다. 이 3부작은 민주당과 자유당이 합동해서 조직한 자유민주당 편의 형태로, 이듬해 1956년에 《裏切られた童心—憂うべき教科書の真相—》으로서 1권으로 통합되었다. 이하에서는 이 판에 의해 그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것을 보면, 교과서의 내용을 언급한 부분이 68쪽인 데 비해 교과서 발행의 실정과 그것을 지탱하는 일본교직원조합을 비판하는 부분이 94쪽으로 그것을 웃돈다. 교과서의 기술 이상으로 유통에 일본교직원조합이 개입하여 활동자금 공급원이 된 점이 당시 보수정당의 위기감을 복돋웠음을 알 수 있다. 거기에서는 ‘상품화되어 버린 교과서의 실정’이라는 표제로 선전비 등에 쓸데없는 돈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교과서는 지나치게 비싸며’ 교직원과 유착한 ‘교과서 판매경쟁’이 행해지고 부독본이나 워크북을 끼워서 팔으로써 ‘정치자금을 모으는 교직원조합’이 고발되었다. 국정교과서라는 문부성이 편찬하는 공공성이 강한 간행물이라는 통념에 익숙해져서, 현재와는 달리 보호자 부담으로 구입해야 했던 당시에는 그 교과서가 ‘상품화’되어 비싼 값이 되고 회사나 교직원조합 이권의 소굴이 되어있다는 공격방법이 설득력을 가진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다른 한편 기술비판에서 최초로 언급된 것은 ‘날림’이어서 ‘너무 많아서 일일이 셀 수 없는 잘못’이다. 예를 들어, 서두에서 채택된 것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사례’(처음 나온 것은 2)이며, 참가국·조인국·비준국의 국가 수나 국명 등의 기술이 부정확하다고 지적되었다. 그리고 ‘신중하게 기술하고자 하는 마음가짐만 있다면 정확을 기하는 것은 손쉬운 일’인데도 이러한 기술이 횡행하는 데에 ‘현재 검정제도 결함의 일단’이 있다고 했다(18쪽). 단순한 잘못으로도 검정을 통과해 버리는 당시의 불충분한 제도가 우선 비판을 받았다.

이어서 이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저자의 정치적인 입장이 기술 내용에 그대로 반영되어 버리는 편향적인 태도가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中敎出版의 《あかるい社會》 상권에 대해서 “이 교과서 후반은 일본의 ‘대륙침략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거기서 일본은 마치 오늘날 공산중국의 아동들이 배우고 있는 것과 같이 완전히 ‘東洋鬼子’로서 묘사되어 있다”고 하면서, 중국의 항일판화나 마오쩌둥(毛澤東)의 사진을 게재하여 묘사한 서술 태도가 비판받았다. 더욱이 “소비에트는 8월 8일에 일본에게 전쟁을 선언하고 소련·만주 국경을 넘어 만주국에 쳐들어왔습니다. 만주에 있던 일본 관동군은 그때까지 일본에서 제일 강한 군대라고 일컬어졌었습니다만, 소비에트 군대에게 여지없이 격파당했습니다”라는 기술을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무슨 기술인가. 사실의 옳고 그름은 제쳐두고 전도된 견해, 소련군의 침입을 바르다고 하는 듯한 문장, 일본군의 패배에 박수를 보내는 것 같은 어감, 이것으로서 과연 일본의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을까”(129~130쪽).

‘침략’이나 ‘해방’과 같은 정치적 판단을 포함하는 용어가 교과서 기술에 직접 사용된 것은 아니다. 그 점에서는 당시의 교과서는 아직 금욕적이었다. 문제는 일본 측의 패배를 밖에서부터 바라보는 시점을 두는 방식에 있었다. 공산중국이나 소련과 같은 사회주의 진영 측에 서서 일본의 ‘대륙침략사’를 비판한다는 관점으로는 ‘일본의 교과서’라고 말할 수 없다는 논법으로 당시의 교과서가 비판받았다.

이 점은 최근의 교과서 비판과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태평양전쟁 패전 이전 일본의 행위를 적대한 측에서의 비판적인 견해와 겹쳐서 보거나, 혹은 일본에 입각해서 뒤돌아본다는 시점의 차이이다. 이 당시는 전자의 견해와 사회주의가 겹쳐졌는데, 오늘날에는 중국이나 한국의 내셔널리즘과 서로 공명하는 관계로 바뀌었을 뿐인 것이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사회과’라는 교과가 만들어진 시점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거기에서의 일본사는 비판적으로 언급되는 일이 많았다. 싫든 좋든 자기들의 조상이 걸었던 궤적을 이해한다기보다 당연히 그러해

야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극복되어야 하는 사례로 여겨지는 일이 많았다. 이러한 역사의 견해는 민주당에서 비판된 ‘편향’적인 기술 쪽에 계승되었다.

분명히 《裏切られた童心》의 머리글에서는 “우리는 평화롭고 민주적인 문화국가를 건설하는 기초가 교육에 있음을 굳게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교육의 위기를 간과할 수 없다”라고 했다. 민주당도 전후 일본국가의 이념을 받들고 그것이 일본교직원조합을 비롯한 사회주의 세력에게 위협받고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일본이 지향해야 하는 목표를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로 하더라도 어느 쪽이든 일본을 적으로 한 제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이 내건 이념인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독립과 함께 민주당은 일본인으로서 일본을 뒤돌아본다는 입장에서 교과서의 상태를 ‘편향’이라 단죄했는데, 그 원점은 점령군 주도로 만들어진 전후의 사회과라는 과목 그 자체 속에 있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裏切られた童心》의 머리글에서는 “국민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교과서를 통해 왜곡되고 교육 그 자체의 근본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 제22 국회의 행정감사위원회에서 밝혀졌다. 그리고 ‘우려할만한 교과서 문제’가 요란한 여론이 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라고도 지적했다. 많은 국민이 알지 못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교과서의 실태는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동떨어져 있다고 단정한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 그것은 일본교직원조합에 가까운 사회당이나 공산당에 비해 선거에서는 민주당이나 자유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실적으로 뒷받침되었다.

예를 들어, 1955년에 《讀賣新聞》이 행한 여론조사(8월 24일)에서는 “초중학교 교과서는 지금처럼 민간업자가 만드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국정교과서로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까”를 질문했다. 이에 대한 회답은 “지금 이대로 좋다 15퍼센트 / 국정화하는 편이 좋다 55퍼센트 / 국정화에는 반대지만 지금의 제도를 고치는 편이 좋다 13퍼센트 / 모르겠다 17퍼센트”였다. 과반수가 국정교과서를 지지하고 현 상태를 좋다고 하는 것이 2할에도 미치지 않았다. 언론계에서는 국정교과서는 배경의 대상이 되었지만 많은 국민에게는 패전 이전에 정착했던 교과서제도 쪽이 당연하며 전후 10년간에 형성된 방식에는 아직 친숙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독립을 계기로 선조의 행보를 이전과 마찬가지로 영웅들의 활약의 장으로서 뒤돌아보는 ‘일본사’에의 관심도 높아졌다.

[독립에 의해] 해금된 일본사 쪽은 사상계의 역코스 상태를 반영했는지 아직 상당히 터부가

많다. 국민적 영웅을 가볍게 보통사람 취급을 하자, 곧바로 반격의 투서의 산이 저자나 출판사 앞으로 날아들었다. 《生きている日本史》 등이 좋은 예다.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木正成)를 악당이면서 멍텅구리라니 무슨 말이나’ ‘너에게 천벌이 내린다’와 같은 류. 오늘날 역사교육의 어려움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毎日新聞》 1952년 6월 30일)

과거 일본인의 활동을 민주주의(혹은 사회주의) 이념에 비추어서 비판한다는 일본사의 서술법도 국민의 대다수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제쳐놓고 일본의 역사를 ‘사회과’ 중에서 더 중시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일본 국내에 대립은 없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된다.

교육의 내용에 관한 정책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자유당의 정책이다. 특히 의무교육의 내용으로서 자유당이 지리, 역사, 수산, 국어과의 충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이것은 아마도 지금의 사회과 중에 포함되어 있는 지리나 역사를 확실히 하나의 기둥을 세워가려고 하는 생각일 것이다. 지금의 사회과, 솔직하게 말하면 미국식 사회과에는 계통적인 지식 교육이 결여되어 있음은 자주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략) 오랜 민족의 역사에 대한 총체적인 지식은 지금의 사회과에서는 얻을 수 없다.

이러한 지금의 지리·역사 취급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입장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가장 많은 것은 일본인이 일본 역사를 총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교육이 있는가 하는 소박한 불만이다. 공산당이 ‘민족교육’을 주장하는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좌익의 사람들로부터도 이른바 ‘민족 해방’과 관련지어 역사가 중시되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전혀 다르지만 주장은 비슷하다. (《毎日新聞》 사설, 1952년 9월 8일)

‘미국식 사회과’로는 ‘계통적인 지식 교육’이 없고 ‘오랜 민족의 역사에 대해 정리된 지식’을 얻을 수 없다고 비판받는다. 그리고 ‘일본인이 일본 역사를 총체적으로’ 알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자유당부터 공산당까지 일치한다고 말한다.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총체적인 지식’을 어른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이 일본을 전쟁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아동이 사회인이 되는 훈련을 하려는 것이 ‘사회과’의 당초 이념이었다. 그러나 일본에서 이러한 교육이념이 정착하지 않고 독립과 함께 이전과 같은 지식 전수형이 부활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방법에서는 일치했지만, 거기서 가르쳐야 하는 내용을 둘러싸고는 일본사회에 깊은 균열이 생겼다. 민주당이 제기한 ‘우려할만한 교과서’ 문제가 밝힌 바와 같이, 민주주의 실현을 이념으로 하는 사회과 교과서에 사회주의적인 관점이 들어가게 되어 정권정당이 이에 반발하는 대립관계가 형성되었다. 보수정당의 비판에 대해서 이른바 혁신계는 이러한 풍조를 태평양전쟁 패전 이전의 일본으로 돌아가는 ‘역코스’이

며 전후 개혁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일본교직원조합은 ‘민주교육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탄압’으로 보고 팸플릿의 신속한 회수, 폐기와 증쇄 배포 중지를 민주당에 제기했다(《朝日新聞》 1955년 9월 8일). 팸플릿 배포가 왜 ‘탄압’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정권정당이 교과서를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은 전부 ‘탄압’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민주주의’적으로 서로 이야기할 문제조차 아니었다. 히다가 로쿠로(日高六郎) 도쿄대 조교수는 ‘짧은 문장을 인용해서 편향이라거나 마르크스주의라고 엄하게 책하는 방식을 취하면 현행 사회과 교과서를 전부 편향이라는 결론을 끌어내는 것도 간단할 것이다’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 비판은 교육이라는 입장에서 순수하고 공평하게 학문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도 ‘정치적인 술책의 수렁에 끌어들이려는 이러한 의도에 나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앞의 신문, 9월 10일). 자신도 교과서 집필자 중 한 사람인 히다가 등 연구자, 교육자는 ‘순수하고 공평하게 학문적’ 입장이지만, 정당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참견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믿고 있었다. 일본학술회의의 ‘학문, 사상의 자유위원회’도 팸플릿을 ‘학문, 사상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라 단정했다(앞의 신문, 10월 25일).

당시 일본의 사회과 학자나 역사학자 사이에서는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이 압도적으로 강했다. 교과서 기술에는 도처에 그것이 반영되었음을 히다가도 인정했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관을 국민 대부분은 공유하지 않았다. 선거를 하면 사회당이나 공산당을 자유당, 민주당, 자유민주당과 같은 보수정당이 득표수에서 압도했으며, 역사를 소재로 한 대중 소설이나 영화 등에서도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자기의 역사관으로 일관하는 것에 부동의 자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 설과 그것에의 비판 관계를 정치적 견해의 대립이 아니라 공평한 ‘학문’에 대한 부당한 ‘정치’ 개입으로 파악했다. 그런 까닭에 ‘학문, 사상의 자유’를 방패로 일체의 비판을 문전박대하는 태도를 취했다.

1956년에 들어오면, 교육위원회와 교과서제도 개정을 목표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아나이하라(矢内原) 총장 등 10명이 성명’을 발표한 것이 신문 1면 톱으로 보도되었다(《朝日新聞》 3월 20일). ‘도쿄대 총장실에서 아나이하라 다다오(矢内原忠雄) 도쿄대 총장, 남바라 시게루(南原繁) 전 도쿄대 총장, 기노시타 가즈오(木下一雄) 東京學藝大 학장이 대표로 기자단에게 발표하고’, ‘오우치 효에(大内兵衛) 法政大 총장, 오하마 노부모토(大濱信泉) 와세다대학 총장, 아베 요시시게(安部能成) 學習院大 학장, 우치다 순이치(内田俊一) 東京工大 학장, 로야마 마사미치(蠟山政道) 오차노미즈여자

대학 학장, 우에하라 센로쿠(上原專祿) 히토쓰바시대학 교수(전 동 대학 학장), 무타이 리사쿠(務台理作) 게이오대학 교수(전 東京文理大 학장) 등 도쿄의 주요 대학총장이나 학장급이 참가해서' 만든 '문교정책의 경향에 관한 성명'이다. 그것에 따르면, '교육은 그때의 정치 동향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되며, 교육의 제도와 방침은 정쟁 밖에서 안정시켜야' 한다. 그러나 두 개정안은 이 원칙을 위태롭게 하고, '민주적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것'으로 '국가통제의 부활을 촉구하는 경향'을 띤다. 이 경향은 '머지않아 언론·사상의 자유 원칙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 '전후 민주적인 교육의 제도와 방침이 창시되고 아직 연월도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 근본원칙은 건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 성명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점이 특히 주목된다. 먼저 그들은 교육위원회나 교과서에 관한 종래의 법률을 국회에서 고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민주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더욱이 특별히 참신한 주장이 아니더라도 '도쿄의 주요 대학총장이나 학장급'이 모여서 발표하면 '정부와 국회의 반성을 촉구하고 여론이 한층 더 흥기'되리라 '기대'했다. '대학총장이나 학장'이란 사회 속에서 특별한 영향력을 가진 초월적인 지위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다.

전자의 점은 바꿔 말하면, 국민 다수의 의향에 의해 교과서의 상태를 결정하려고 하는 방식을 거절하는 것이다. 이것은 학자뿐만 아니라 저널리즘에도 퍼져있던 발상이었다. 그것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주장에 나타난다.

일본의 문교정책에서 하나의 모순 혹은 비극적 위험은 종전 후 10년에 겨우 싹튼 민주주의가 (민주당, 《우려할만한 교과서》 등에 의해) 운명적으로 폭로된 그 결점에 의해 후퇴로의 구실이 주어진 것이다. 이리하여 민주주의를 전진시키려는 자와 그것을 후퇴시키려는 자와의 항쟁이 생겨나고, 마침내 일본교직원조합 대 문부성 혹은 보수정당과의 격심한 대립을 보게 되었다. (중략) 교육에는 정당은 없다. 미국의 개입에 의해 생긴 교육제도상의 과도함은 이미 만인이 인정하는 바이며 이번의 수정개혁은 필요하며 이 점 우리는 기요세 아라타(清瀨新) 문부대신의 초당파적 예지에 기대하는데, 전 세계의 인간성 향상으로 통하는 헌법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과 같은 문교정책을 실행할 경우 엄중한 비판의 표적이 될 것이다.(《讀賣新聞》 사설, 1955년 12월 1일)

여기서는 교과서문제를 '민주주의를 전진시키려는' 일본교직원조합과 '후퇴시키려는' 문부성이나 보수정당과의 대립으로 보았다. 그러나 자유로운 선거에서 다수를 차지한 정권정당이 문교정책을 컨트롤하는 것은 민주정치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문부성

을 통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의 현상이 국민 상식에서 동떨어져 있다고 널리 국민에게 호소하는 수법이다. 그것에 의해 얻은 국민의 공감을 교과서를 시정하는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운명적으로 폭로된 그 결점’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교과서와 부교재의 끼워 팔기 등이 일본교직원조합의 이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적대하는 쪽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민주당은 팸플릿 간행을 여론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보며, 당시의 문부대신 마쓰무라 겐조(松村謙三)도 여기에 찬동했다. 당시의 신문은 ‘교과서 비판은 필요 / 팸플릿문제 마쓰무라 문부대신이 답함’이라는 기사제목으로 중의원 문교위원회에서의 질의응답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좌파 사회당 의원이 “민주당의 팸플릿 ‘우려할 만한 교과서’는 문부성 검정의 권위를 더욱 손상시켜서 검정교과서는 믿을 수 없다는 풍조를 불러오는 것이다”라고 추구한 데 대해 마쓰무라는 “서로 비판을 주고받는 것은 민주정치의 본질로서 늘 있는 일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여론 定評이 귀결점에 귀착한다. 이것을 못하게 하는 쪽이 도리어 폐해를 낳는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정당, 일본교직원조합, 학자 그룹 등 각 단체의 다양한 의견, 비판을 하나하나 거론하고 여기에 의견을 말하는 것이 문부대신의 직분이 아니므로 양해하기 바란다. 교과서제도에 관한 스캔들을 없애고 학부형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싶다는 것은 여론으로 제도를 좋게 하고 싶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목표와 같다고 생각한다”라고도 말했다(《毎日新聞》 1955년 10월 5일). 여론에 바탕을 둔 ‘민주정치’에 의해서 교과서제도를 컨트롤하는 것이 당시 정부의 목표였다.

이처럼 민주주의적인 교과서 시정의 노력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학장 성명’은 ‘국가통제의 부활을 촉구하여’, ‘머지않아 언론·사상 자유의 원칙을 위협하는’ 시도라고 간주하였고, 《讀賣新聞》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행위로 파악했다. 그들의 근거는 ‘창시되고 아직 연월도 오래되지 않’은 ‘민주적 교육제도’(‘학장 성명’)의 옹호이며, ‘전 세계의 인간성 향상으로 통하는 신헌법의 정신’(《讀賣新聞》)이었다. 일본국민 다수의 의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점령군 주도하에 만들어진 ‘민주적 교육제도’, ‘신헌법의 정신’을 지켜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전진’이라고 그는 믿었다. ‘민주적’ 제도와 ‘신헌법의 정신’이 국민에게 충분히 침투되지 않았으며 이를 틈타 보수정당이 패전 이전의 일본으로의 ‘역코스’를 취하려고 했다. 그것을 저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적인 행위라는 논법이다. 이것이 국민 다수의 의향과 서로 대립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장을 민주주의적이라고 완강하게 계속 믿는 근거가 되어간다. 교과서의 일본사 기술에 대해서 말하면,

선조의 영위에 대한 내재적인 이해를 심화시키기 보다는 민주주의, 나아가서는 사회주의와 상반하는 과거 지배자의 행동을 비판하는 사례집이어야 했다. 여기에는 《讀賣新聞》이 말하는 것과는 반대의 의미로, ‘일본의 문교정책에서의 하나의 모순 혹은 비극적 위험’이 있었다. 그리고 독립과 함께 형성된 이와 같은 대립도식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크게 변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맺음말

메이지시대 문부성의 교과서 행정은 가지각색으로 동요했으며 최초부터 일관해서 국정교과서의 실현을 목표로 했던 것은 아니다. 국정교과서제도는 다양한 요인이 뒤얹혀서 사회로부터 고조된 기운이 정부를 움직이는 형태로, 결과적으로 실현된 제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 이전의 검정제도에서는 교과서 기술내용보다도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였다. 또 국정교과서가 되고나서도 여론이 그 내용에 주문을 걸었다.

국정교과서 개정은 전쟁이 일어난 후에 행해졌다. 즉 국정교과서의 이데올로기가 침투한 결과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쟁에 의해 일본사회의 의식이 크게 변모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국정교과서의 개정이 행해지는 흐름이었다. 일본에서 국정교과서가 사용된 시대는 일본이 차례차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자기의 현대사를 국민이 자랑스러워 여기고 뒤돌아 볼 수 있게 된 시기와 거의 겹쳐진다. 그러한 자신감이 단일의 국정 역사교과서에 의한 의무교육이라는 틀의 큰 뒷받침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점령기에 만들어진 ‘사회과’는 다양한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자신이 사회생활에서 ‘민주주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체험을 통해 몸에 익히는 것을 지향했다. 이 때문에 일본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았다. 그리고 과거의 일본을 언급하는 경우에도 전후가 되어 비로소 획득한 평화와 민주주의에 비해 잘못된, 혹은 불충분한 제도가 지배했던 시대의 증거로서 불려나가는 형태를 취했다.

독립 후의 일본에서는 사회과의 이 두 가지 특색이 재평가되었다. 전자의 체험학습은 거의 정착하지 않았고 국정교과서 이래의 체계적인 지식전수라는 방식으로 배우는 학과로 돌아가서 일본사의 기술량도 증가했다. 이것은 서두에 서술한 바와 같은 초등교육의 특징으로 보아 당연한 일일 것이다. 후자에 대해서 말하면, 과거의 잘못을 강조하는 역사관을 대다수 국민이 공유했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 미토 고오몬(水戸黃門)을 반민주주

의적이라고 흠을 잡는 일본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정권정당인 민주당이 제기한 ‘우려할 만한 교과서’ 문제는 이와 같은 많은 국민에 호소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나 교직원조합, 그리고 저널리즘으로부터 광범위한 반발의 소리가 일어났다. 그들은 과거의 일본과 전후 일본을 대치시키고, 특히 ‘전전’ 일본을 부정하고 극복함으로써 전후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파악했다.

본래 민주주의란 구성원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다. 자기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소수라면 우선은 잘못된 다수 의견을 따르면서 장래 자기들의 의견이 다수가 되는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 절차를 무시하는 방식에는 ‘강권’, ‘전제’, ‘독재’, ‘파쇼’ 등등 폄하하는 말이 붙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 다수가 ‘전전’ 이래의 낡은 가치관에서 탈각하지 못하고 전후 개혁의 이념을 흡수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구태의연한 다수의견을 배제하고 전후 ‘민주주의’적인 사고를 관철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하게 ‘민주주의’적이라는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 이 倒錯했다고도 말할 수 있는 완고한 사고가 교과서에 대한 정권정당이나 문부성의 시정 노력을 딱 잘라 거절해왔다. 더구나 ‘대학’이라고 하는 문부성에 의한 국가통제 없이는 하루도 유지할 수 없는 조직을 의지할 곳으로 삼는 ‘학계’를 ‘세속’의 비판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는 특권적인 고지에 둔다는 권위주의가 그 뒷받침이 되었다. 대학교수를 정점에 모시고 교사나 언론인을 거느린 진보적 세력이 국민 다수의 의향을 토대로 할 터인 문부성의 시책을 ‘전전’ 회귀의 ‘반동’이라 단정해 버리는 사고가 전후 일본 교과서의 상태를 결정했다고 말해도 좋다.

거기에는 교과서는 집필자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역사관에 입각해서 써야한다는 전제가 있다. 그러나 패전 후의 일본을 넓게 살펴보면, 자기 근현대사에 대한 평가는 굴절되었다. 그것은 오늘날의 국가 모습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현재의 일본국은 헌법을 비롯해서 점령군이 도입한 제도와, 메이지 이후 형성된 근대국가체제가 뒤섞여서 만들어졌다. 전자는 군국주의를 타도하고 일본을 민주화해야 한다는 미국의 신념이 근원이 되었으며, 후자는 일본인 자신이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근대화를 이룩해왔다는 역사인식의 근거가 되었다. 이에 대응해서 국민 간에도 패전 이전 일본의 궤적에 대해 부정적 파악 방식과 긍정적인 평가가 다양한 형태로 교착되어 있다. 오늘의 일본은 국정교과서 시대와는 달리 결속해서 자기의 행보를 회고할 수 없다. 이것이 가장 정통적인 역사서술이라고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우월적인 해석이 존재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어떠한 입장이든 이것이다 하고 정해버리는 역사관으로는 통일할 도리가 없는

현재의 국민의식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만약 특정의 해석을 일관하면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으로부터의 반발이 고조되어 정치적인 대립에 학교교육이 말려들지도 모르며, 실제로 그렇게 되어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교과서 집필자는 어떠한 역사관이나 정치신념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기가 바르다고 믿는 이념을 강요하는 교과서를 써서는 안 된다. 그것이 아니라 현대일본의 錯綜한 역사 감각을 되도록 충실히 반영시켜서 더 많은 국민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일본 역사교과서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은 경위에 의해서 그렇지가 않다. 거기에 묘사된 일본 史像은 분명히 역사학자 사이에서는 유력하며 교사로부터 강하게 지지받는 해석인지 모르지만 다양한 국민의 상식을 반영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이 비틀린 관계를 생각하는 데에 많은 역사학자나 교육학자가 품고 있는 국정교과서관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소론에서 참고로 한 가지야마 마사후미와 같은 연구는 매우 예외적이며, 많은 역사학자나 교육학자는 국정교과서를 국가이데올로기를 국민에게 불어넣는 도구로서 만들었다고 하는 종래의 해석을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그들은 자신이 교과서를 집필할 때도 오늘의 다양한 국민의식을 존중하기보다도 두 번 다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 평화주의와 민주주의를 고취하는 수단이라 간주하고 있다. 즉 그들의 교과서관은 그들이 규탄하는 국정교과서의 상태와 언뜻 보기에 정반대로 보이지만 교과서는 자기들이 바르다고 믿는 이데올로기를 국민에게 침투시키는 수단으로 보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그들은 역사라는 거울에 과거의 事象을 되도록 충실하게 묘사해 내려고는 하지 않고 자기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거울에 좌우가 반대가 되어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이전의 일본 지배자라고 공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그렇게 믿어버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과거의 교과서를 철저히 검토한다면, 상당히 다른 모습이 떠오른다. 청일, 러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근대적인 대국으로 올라간 것에 많은 국민이 긍지와 자신감은 가졌던 것이 국정교과서의 버팀목이 되었다. 그러는 이상에는 국정교과서도 당시의 국민이 가져야 하는 상식을 반영했다고 말할 수 있다. 교과서는 아동에게 특정의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는 수단이 아니다. 국민이 공유하는 통념을 차세대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교과서를 작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교과서 역사를 뒤돌아보아 분명한 것은 교과서가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교과서를 만든다는 것이다.

본 논문 작성에서 재단법인 교과서연구센터부속 교과서도서관이 소장한 전후 일본의 소학교 6년 대상 사회과 교과서 전 종류를 훑어보고 에도 시대 이래의 일본사 서술을 조사했다. 그 성과를 이번에는 직접 살릴 수 없었지만 다른 기회에 발표할 생각이다.

[비평문]

이찬희

I. 논문의 내용과 문제의식

필자의 논문은 일본 국정교과서제도의 형성과 그 역사서술의 특징을 살펴보고 국정교과서와는 對極의 방향을 지향한 태평양 전쟁 후 검정교과서인 소학교 사회과교과서 속의 일본사 특히 근현대사 내용이 어떻게 기술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우선 먼저 국정교과서의 성립과 변천에서 전전 검정교과서제도의 붕괴와 국정 교과서제도의 도입을 다루고 1904년부터 1946년까지 간행된 국정교과서(국사)(1919년 이전 ‘일본사’), 수신, 국어에 서술된 근대 일본과 태평양 전쟁 이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다음에 제시하는 4가지 관점에서 사회과의 이념, 사회과 교과서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필자는 첫째, 검정제가 국정제에 비해 민주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국정교과서가 국민의 사상통일의 도구로 이용되어 국민을 전쟁으로 이끌었으며, 그에 대한 반성 속에서 전후 소학교 교과서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패전 후의 일반적인 국정교과서 이미지를 비판한다. 그는 민주적인 검정제가 정부의 사상통제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강변한다. 그는 55%의 국민이 소중학교 교과서가 지금과 같이 민간업자가 만드는 것보다는 국정화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는 1955년 요미우리 신문 여론조사를 인용하고 있다. 심지어 국정교과서 개정은 전쟁이 일어난 후에 행해졌다고 하면서 국정교과서의 이데올로기가 침투한 결과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쟁에 의해 일본사회의 의식이 크게 변모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국정교과서의 개정이 행해졌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국정교과서가 사용된 시대는 일본이 차례차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자기의 현대사를 국민이 자랑으로 여기고 뒤돌아 볼 수 있게 된 시기와 거의 겹쳐진다는 주장이다.

또한 청일, 러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근대적인 대국으로 올라간 것에 많은 국민이 긍지와 자신감은 가졌던 것이 국정교과서의 버팀목이 되었다고 하면서 국정교과서도 당시의 국민이 가져야 하는 상식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과서는 아동에게 특정의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는 수단이 아니고 국민이 공유하는 통념을 차세대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교과서를 작성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둘째, 민주당과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 등을 진보적 입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의 태도와 입장이 단지 국정제인가, 검정제인가의 제도 문제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번 선거에서 “현행 교과내용은 우리나라 사정에 즉응하지 않는 점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개혁을 행한다”(讀賣新聞 사설, 1955.3.26)고 한 민주당의 문교정책을, 사상통제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나고 비판한다. 비록 민주적인 검정제를 만들어 놓아도, 정부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것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한다.

셋째, 전전의 일본이 잘못되었다는 관점이 관철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소학교 교과서가, 전후에 일본이 비로소 평화와 민주주의를 달성했다고 간주하고 그와 대비하여 과거의 잘못을 강조하는 관점이 관철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사회과 교과서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것은 전후에 만들어진 일본국 헌법이며, 그와는 대조적으로 패전 이전 일본이 걸어온 길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역사관을 대다수 국민이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패전 이전의 가치규범을 긍정하는 의식이 강했다고 주장한다.

이 논점은 일본사 분량 자체가 매우 적다는 점과 통한다고 보면서 사회과 교과서에서 일본사의 기술량은 극히 적으며 현재와의 비교를 통해 비판적으로 언급되는 재료가 취급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민주주의의 역사가 일본인이 속해 있는 政體와 일본어를 사용하고 일본문화를 육성해온 일본민족의 역사라는 관점을 결여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한다.

넷째, 전후 사회과 교과서 내용이 “미국식”이라고 비판한다. 이와 같은 교과서 내용의 결함은 사회과 교육이 점령군의 강한 요청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과 연관된다고 보면서 “미국의 개입으로 인한 교육제도 상의 과도함은 이미 만인이 인정하는 바로 최근 수정 개혁이 필요하다...”는 讀賣新聞 사설(1955.12.1)을 인용하고 있다. 미국식 사회과에는 계통적인 지식교육이 결여되어 있는데, 특히 일본 민족의 오랜 역사에 대한 정리된 지식을 미국식 사회과에서는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미국식 사회과 교육에 보수파도 혁신파도 적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 증거로 “공산당이 민족교육을 주장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 내용적으로는 다르지만 주장은 유사하다”고 한 1952년 毎日新聞 사설을 인용하고 있다.

II. 비평

평자가 보기에는 필자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미 입장을 세워놓고 글을 풀어가고 있다. 이 논문의 주요 관점은 앞에서 논의한대로 대략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모두 같은 방향에 서 있는 것들이다. 전후 소학교 사회과(역사) 교육에서 일본의 과거 역사가 과도하게 비판적으로 서술되었다는데, 필자는 반대 주장을 ① 검정제에 대한 우려, ② 진보적 입장에 대한 비판, ③ 일본의 과거사 비판에 대한 우려, ④ 미국식 교과내용에 대한 비판으로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이 미리 세워져 있으니, 주장만이 선명하게 부각될 뿐, 그 세밀한 교과서의 내용 분석이 거의 없다. 왜 국정제보다 검정제가 더 위험할 수 있는지 일교조의 주장이 과도한지, 전전의 일본이 잘못했다는 것이 왜 옳지 않은지, “미국식”이란 대체 무엇인지 등이 설득력 있게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국정제를 원하고 국정제가 더 합당하다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학술적 자료보다 신문사설을 주로 인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학술적인 자료보다는 신문사설을 주로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글 전체를 통하여 학술적인 글을 인용한 곳은 《近代日本教科書史研究(1988)》 부분 한 곳이며,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신문사설이나 기사, 여론조사를 인용했다. 이것은 필자가 연구에 앞서 사설이나 여론조사에 토대를 두어 자신의 입장을 먼저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신문자료가 중요한 일차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입장이 넓은 여러 신문 중에서 유독 讀賣新聞, 朝日新聞, 毎日新聞을 집중적으로 고찰한 이유는 무엇인지. 국정제를 지지하는 조사결과를 선택한 것은 아무래도 필자의 입장에 맞춘 편파적 자료 사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 같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인용한 자료가 거의 1950년대 발행된 신문 기사, 사설, 여론조사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다.

Ⅲ. 마무리하면서

전후 소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역사서술이 지나치게 일본의 과거에 대해 비판적이고, 미국식 제도가 이식된 것이며, 일본민족의 역사를 바로 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그러한 주장만이 여러 다른 말로 되풀이 되었을 뿐, 설득력 있게, 학술적으로 논술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당초 한국과 일본의 교과서편찬제도 비교 연구를 하기로 했는데, 필자는 戰前의 일본 국정교과서와 戰後의 검정교과서 비교하면서 오히려 일본의 국정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옹호하는 입장이다.

그 동안 일본측은 한국의 ‘역사교과서 문제’ 비판에 대한 반비판의 전형으로 이른바 “검정제도를 택한 일본에 비해 한국은 아직도 국정이 아닌가”라고 비판해 왔다. 그러나 일본측이 戰前의 일본의 국정과 같은 것을 연상하면서 한국의 ‘위탁연구개발형’의 국정 교과서 제도를 비판해 왔었는데, 필자의 논문을 통해서 일본의 국정제를 옹호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국정’이라도 한일간에 개념상, 운영상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집필자 답변]

학교 교육의 본래의 역할은 국민 대다수가 공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식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에 있다. 국어와 산수 등과 동시에 일본사를 교육하는 것도 이를 위해서이다. 연구자가 각각 서로 다른 시점에서 분석하는 역사 연구와 역사 교육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다. 그리고 국정 교과서 시대에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였는데 전후 검정제도로 이행되면서 역사 교과서는 치열한 정치적 대립을 불러일으키는 근원이 되어 버렸다. 이처럼 교과서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를 설명한 것이지 결코 국정 교과서 제도를 옹호하고 검정 교과서 제도를 비판한 것이 아니다.

국민으로서의 상식을 가르치는 것이 학교 교육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국민의 상식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실마리를 신문에서 구한 것인데, 마이니치(每日)·아사히(朝日)·요미우리(讀賣)를 재료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왜 그것이 ‘학술적 자료’가 아닌지 이해하기 어렵다. 꼭 ‘학술적’이라는 말을 정의하여 주기 바란다.

그리고 전후 교과서 문제의 근원에는 다음과 같은 ‘민주주의’관의 대립이 있다고 논문에서 지적하였다. 즉, 과반수의 국민의 지지를 받아 보수 정당은 ‘민주주의’의 수순을 밟아 교과서 제도를 개정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전후 민주주의’ 이념의 실현을 지향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적이라고 믿는 쪽이 소수파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반발하였다. 그들은 이를 정치적인 대립이 아니라 학문에 대한 정치의 개입으로도 파악하였다. 이러한 대립 관계는 그 후에도 기본적으로 변함없이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요한 점을 빠뜨리고 당시의 논의를 그대로 필자의 생각인 것처럼 혼동하는 것은 잘못이다. ‘민주적인 검정제가 정부의 사상통제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강변’ 따위는 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당시의 진보적인 입장의 사람들의 주장이다. 또 민주당의 문교 정책 비판은 《요미우리신문》이 행한 것이지 내가 주장한 것이 아니다. ‘미국식’이라는 비판도 당시의 여론을 소개한 것일 뿐이다.

이처럼 오해에 가득 찬 요약을 하고서 내가 가장 말하고 싶었던 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미리 입장을 정하였다’고 단정 지은 것은 유감이다. 여기에 보인 ‘입장’은 이번의 분석의 결과 얻은 잠정적인 전망이며 보다 설득력 있는 해석이 등장한다면 곧바로

철회할 용의가 있다. 또 교과서 제도의 발자취를 오늘날의 입장에서 심판하는 것에 역사 연구의 목적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 어떠한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라도 선 악은 별도로 하고 되도록 깊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 통치 시대를 ‘일제강점기’라고 부르는 경우처럼, 일본은 악의 화신이라고 ‘미리 입장을 정’하여서 오늘날의 눈높이에서 단죄하려는 자세를 취할 생각은 없다.

이상과 같이 이 비평은 논고가 지향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논문만이 아니라 비평에서도 한국 측과 학문적으로 의의 있는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